

# 코로나 극복과 4월 보선 표심이 대선 항배 가른다

이번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대선 정국의 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가족, 친지간의 만남은 과거에 비해 크게 제한적이었지만 내년 대선은 설 명절의 중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음달 9일, 내년 3·9대선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오고 대선의 전초전격인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전이 점화되면 대선 정국은 점차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차기 대선 구도를 뒤흔들면서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물 밑 행보를 보였던 여야의 잠룡들은 4·7 보궐선거 이후, 대거 수면 위로 부상하며 차기 대선 티켓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민주·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은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면서 차기 대선 구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 정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칠 전망이다. 코로나 19 방역과 백신 접종, 민생경제 회복, 4·7 재보선, 야권 통합 등 대선에 영향을 끼칠 정치적 변수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여야의 대선 구도와 변수 등을 조명해본다.

**여권**

정세균 코로나 성공적 극복엔 대선가도 탄력 붙을 듯  
이재명 1위 독주체제 대세론 굳히기까진 난관 많아  
이낙연 4·7 재보선 승부수 반등 계기 만들지 관심  
민주 텃밭 호남민심 대선구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야권**

윤석열 지지세 하락으로 대선후보 춘추전국시대  
강력한 후보 없는 보수진영 통합 여부가 최대 변수  
서울·부산 재보선 결과가 정권교체 가능 바로미터  
국민의힘 '호남 동행' 정책 진정성 보일지도 관심

만큼 자연스럽게 야권 통합이 정권 창출의 동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는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점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통합을 통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현재의 대선 구도는 다시 짜여질 수밖에 없다. 특히, 통합을 통해 새로운 보수 진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을 통한 '건강한 보수 정당의 정체성 정립'은 중도 진영으로의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을 1년여 앞두고 여야 대권잠룡들이 벌써부터 호남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7년 5월 7일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권 대선 구도=민주당 당헌에는 대선 선거일(내년 3월9일) 전 180일까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역산하면 오는 9월 10일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셈이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낙연 대표가 내년 대선에 나가려면 3월 9일 이전에 당권을 내려놔야 한다. 사실상 여권의 대선 경선 출발점이 된다.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6월 21~22일이다. 예비후보가 최소한 5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비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 경선은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다. 선거인단 모집은 1차(7월3~17일)와 2차(7월18~8월1일)로 나눠 진행되며, 경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월 3일부터 4일까지다. 등록을 마친 경선 후보들은 8월 14일부터 순회 경선에 들어간다. 순회 경선은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권역별 7차레 또는 광역시도별 13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 9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온라인(모바일+인터넷) 투표에 들어간다. D-180일인 9월 10일에는 투표소 현장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경선은 권리당원 50%에 일반국민(일반당원 포함) 50%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정치권에선 이낙연 대표의 사퇴일을 민주당 대선 경선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어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 대선 경쟁 초반 구도에 있어 최대 변수는 '이낙연'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9일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4·7 재보선을 치르며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이 대표는 일정 정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법) 등 입법 성과를 통해 지지율 제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정책역사표를 통해 임기내 마지막 전국 투어에 나서며

민심 잡기에 나선다. 특히, 이 대표는 지역 기반인 호남의 '영산강 전선'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이런 가운데 4·7 재보선 결과는 이 대표에게 차기 대선 도전 여부를 가능할 최종 성적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한 군데 이상 지켜내지 못한다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이 대표가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하는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에서 차기 정권 각료를 추천하는 내각제 성격의 '책임정당제'를 명분으로 이 대표가 김메이커로 돌아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30%대를 돌파하며 1강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지지율이 대세론으로 굳어지지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이 지사의 지지율 상승에는 대세론에 민감한 중도·무당파의 합류가 영향을 미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강력한 대선 주자가 부상하지 않으므로써 이 지사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더 얻었다는 논리다. 여기에 이 지사의 경쟁력이 강해질수록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른바 친문 진영의 '비토' 정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도 과제다. 정치는 도전보다 수성이 어렵다. 지지율 선두로 나선 만큼 견제도 심해질 전망이다. '반 시장적 포퓰리스트'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대선 본선에서의 '이재명 리스크'가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총리도 정치적 존재감을 연일 확대하고 있다. 현안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명확히 하면서 이재명·이낙연으로 고착된 당내 경쟁구도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총리가 브랜드화하고 있는 '손실보상제'가 대표적이다. 6선 의원 출신인 정 총리는 장관과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지냈다. 1950년 생으로만 70세라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여정에 있어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대선이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4·7 보궐선거 이후 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총리가 코로나 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다면 그의 대선 여정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정 총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6%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견인하면서 '재평가 우량주'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은 물론 '정세균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내의 확고한 기반은 정 총리의 또 다른 강점이다. 하지만 정 총리가 마지막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혁 진보의 정체성과 미래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과 원조 친노(친 노무현)인 이광재·김두관 의원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당내 제3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제3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5%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다면 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를 뒤흔들 다크호스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거취도 민주당 대선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야권 대선 구도=한동안 주목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야권은 대선후보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후, 야권의 대권 레이스가 소용돌이 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권 대선 레이스의 최대 변수로는 '통합'을 꼽을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외의 제2, 제3의 강력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는

이를 반영하듯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내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여론조사에서 선두 주자가 30%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대선까지 이어지리라 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변화의 소용돌이가 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민의 힘이 내건 '호남 동행'이 얼마나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 힘은 그동안 '사친 정책'에 따라 광주·전남에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펼치는 등 애정을 쏟았지만 정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국회에서 5:18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호남동행에 참여해 광주에 제2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호남동행'이 '호남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의 대표적인 대권주자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홍정욱·유승민 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 총장은 충청권에서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범야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한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윤 총장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추-윤 갈등'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탄탄한 충청권에서 반문 진영이 결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 총장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라는 프리미엄도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대구 등지를 돌며 입지를 다지고 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난 대선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권 준비'에 나섰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원희룡 지사도 최근 여당의 법관 탄핵 발의에 "결국 민주당은 오늘 헌법의 대원칙을 짓밟는다"고 비판하고 나서서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홍정욱·유승민 전 의원은 SNS 등을 통해 정국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야권 후보군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5%대 지지율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꿈의 시작 광주

광주 인공지능시대 첫걸음,  
국가 AI 데이터센터 착공

시 강국 대한민국, 꿈 실현 전진기지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